

“檢 특활비·김건희 예산 삭감 저지” vs “지역화폐 등 증액”

〈與〉

〈野〉

예결위 예산소위

내년 677兆 규모 예산안 살바싸움 與 “李 방탄용·‘묻지마’ 삭감” 지적 野, 대통령실·경호처 삭감도 추진



박정(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2025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가 677조원 규모의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 치열한 살바싸움을 시작했다. 여당은 ‘이재명 예산’, 야당은 ‘김건희 예산’을 두고 칼질을 예고하고 있어 곳곳에서 격돌이 예상된다.

여야는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열고 예산안 증·감액 심사를 시작했다. 예결위 예산소위는 국회 예산심사의 ‘최종 관문’으로, 세부 심의를 통해 사업별 예산의 감액·증액을 결정하는 곳이다.

오늘 25일까지 열리는 이번 심사는 그간 상임위별로 실시했던 예비 심사 결과를 기반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예비심사가 마무리된 곳은 법사위·외통위·국방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보건복지

위·국도위 등 총 7곳에 불과하다.

여야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마음투자 지원 예산, ‘개 식용 종식’ 예산 등을 들며 각각 ‘이재명 예산’, ‘김건희 예산’으로 규정하고 칼질을 예고한 상태다. 또 검찰·감사원의 특수활동비(특활비)나 정부 예비비 등을 둘러싼 공방도 치열할 전망이다.

우선 ‘정부 예산안 사수’에 나선 국민의힘은 상임위 단계에서 야당 주도로

삭감된 예산들의 복원을 추진한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심사방향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대표 방탄을 목적으로 한 일방통행식 ‘묻지마’ 삭감 예산은 인정될 수 없고 정부안대로 되돌려 놓겠다”면서 검찰의 특수활동비 80억원·특정업무경비 506억원 전액 삭감을 지적했다.

특히 야당이 ‘김건희 예산’이라며 삭감한 개 식용 종식, 마음건강 지원사업

예산에 대해서도 삭감을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도 당론으로 추진한 ‘개 식용 종식’ 관련 육견업 지원금을 정치 예산으로 호도하는 등, 프레임을 덧씌우는 예산삭감 주장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정치 예산으로 호도되는 예산으로는 마음건강 지원사업 예산, 용산 어린이 공원 관련 예산 등을 들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12월2일(예산안 처리시한)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예산안 자동부의 조항을 삭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할 경우 대통령의 재의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김건희 예산’ 삭감 및 ‘이재명 예산’ 증액을 예고했다. 우선 민주당은 지역화폐,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난 안전, 재생에너지 등 이재명 대표를 상징하는 사업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대폭 증액에 나서고 있다.

또 야당이 ‘김건희 예산’이라고 비판한 마음건강 지원사업 예산은 앞서 국

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74억7500만 원이 감액돼 433억5500만원으로 책정된 채로 예결소위로 넘어갔다.

게다가 민주당은 지난 8일 검찰, 감사원 등에 대한 특활비를 ‘권력기관 싹짓돈’이라며 전액 삭감했다. 운영위원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경호처에 대한 대규모 예산 삭감에도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심사 과정에서 예산을 사수하려는 여당과의 충돌이 예상된다.

예비비도 쟁점이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열린 기재위 예산소위에서 4조 8000억원의 예비비 절반에 달하는 2조 4000억원을 감액한 안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외에도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예산 삭감, 동해 ‘대왕고래’ 가스전 예산 등도 삭감할 방침이다.

한편, 국회 예산소위에서 의결안이 나오면 종합심사와 본회의를 거쳐 내년 예산이 확정된다. 예결위는 25일까지 소위 심사를 마치고 29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은 내달 2일이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李 1심 판결’에 비명계 행보 주목... 친명계, 내부결속 강조

내달 비명계 원외모임 ‘초일회’ 예정 김부겸 전 총리, 김동연 지사 등 접촉 친명계 ‘단일대오’... 견제 움직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친명계 최고위원 발언을 듣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비명(비이재명)계 잠룡들의 행보가 눈에 띄고 있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 이어 위증교사 혐의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으면 ‘이재명 체제’ 리더십에 타격이 있을 수도 있다. 비명계는 이 대표의 1심 판결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정치적인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친명(친이재명)계 지도부는 내부 결속을 강조하고 있어 양 진영 간의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된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비명계 전직 의원들이 주축이 된 원외 모임 ‘초일회’는 12월1일 월례모임에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초청해 특강을 진행한다.

김부겸 전 총리는 ‘미국 대선 평가와 한미 관계 국제 정세 전망’이란 주제로

퍼드대에서 특강을 한 뒤 15일 귀국했다. 특강에서는 한미관계와 국제정세에 대해 토론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부겸 전 총리 측도 별도 공지를 통해 “특강은 미 대선 얘기로 한정한다”며 “국내 정치 부문은 다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표의 1심 판결과는 무관한 행보라는 의미로 보인다.

그러나 정치권은 김 전 총리가 오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 직후 비명계와 만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

또 초일회는 내년 1월 특강을 위해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접촉 중이다. 김 전 총리와 김 전 지사, 김 지사는 비명계 대권 주자 ‘3총3김’(김부겸·이낙연·정세균, 김경수·김동연·김두관)으로 분류된다. 만약 강연이 성사된다면 비명계 대권주자들과 초일회가 연달아 만나는 셈이다.

현재 독일에 체류 중인 김경수 전 지사는 당초 12월쯤 귀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연구 일정을 추가로 검토 중이다. 이에 내년 초에 귀국할 가능

성도 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총선에서 낙선·낙선한 비명계 인사를 대거 경기도에 영입하며 세 걸잡에 나서는 모양새다.

이외에 올해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표와 맞붙었던 김두관 전 의원도 최근 공개 활동을 늘렸다. 김 전 의원은 1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통령 임기단축과 개헌 추진을 위한 1인 피켓 시위를 했다.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경선에 출마한 박용진 전 의원은 내년 1월부터 정계에 복귀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단일대오’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의원 27명은 입장문을 통해 1심 선고 결과를 비판하며 “이 대표 죽이기에 전력을 다해도 이 대표는 쓰러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친명계에서 비명계의 세력화 가능성을 견제하는 움직임도 보였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에게 “대표 1심 판결 이후 당 내부 결속은 더 단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이날 한 방송에서 비명계에 대해 “지난 총선에서 당원과 국민들에게 일정한 판단을 받은 분들”이라며 “정권교체의 큰 흐름으로 밀고 가고 있는 당에 무슨 영향을 미치겠냐”라고 말했다. 이어 비명계 잠룡들에 대해서도 “이러저러한 변수에 영향을 받을 정도로 현재 민주당의 내부나 또는 지도력이 흔들릴 여지가 없다”고 일축했다.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은 “(3총3김도) 민주당이 당대표 중심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는 데에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김동연 지사는 16일 토요일 집회에도 나오셨다. 우연히 만났는데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민생경제 분야에 집중한다. 오는 20일 ‘국내 주식 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 투자자 간담회’를 진행하고, 같은 날 한국무역협회 윤진식 회장을 만난다. 21일에는 전국 상인연합회 간담회를 개최하며 경기수원 영동시장을 방문한다. 오는 27일에는 고교 무상교육 방침을 알리기 위한 학교 방문 일정을 계획하고 있다. /서예진 기자 syj@

與野, 오는 22일까지 국회 뭉 헌법재판관 추천절차 마무리

내달 2일, 10일 본회의 진행

여야가 오는 22일까지 국회 뭉의 헌법 재판관 추천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정기국회가 마무리되기 전인 내달 2일과 10일에 본회의를 열겠다는 방침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국회 추천 뭉 헌법재판관 3인을 22일까지

추천을 마무리하고 정기국회까지 임명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아직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 양당 간 어떤 숫자로 추천할지에 대해 계속 이야기를 더 나눠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예산안 법정시한인 내달 2일과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내달 10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 외에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본

회의를 잡는 건 양당 수석들 통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후·윤리·연금특별위원회 논의를 통해 정기국회 내에 출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추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내에 가능한 합의해서 출범시키자는 데 큰 틀에서 공감했다”면서도 “특위 출범 여부와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양당 수석 간에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채 해병 순직 사건 관련 국정조사 추진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추 원내대표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가 진행될 뿐만 아니라,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청문회와 국정감사를 밀도 있게 했기 때문에 국정조사 필요성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채 해병 순직 사건 관련 3번의 특검 요구가 대통령 거부권으로 부결됐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면 안 된다는 민의를 받은 것”이라

며 “대통령의 특검 거부에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 국회의장께서 양당의 의견을 묻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 대통령 친인척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을 추진하기로 한 것을 두고도 여야 간 입장을 보였다. 박 원내대표는 “특검이 맞물려 있는데 특검을 거부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 것이라면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특별감찰관과 특검은 각각 독립해서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